

하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기업지원과】

하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례 위임 조항 수정(안 제1조)
- 나.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13조)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규정 개정(안 제14조제5항, 제15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년 9월 2일 ~ 9월 12일(1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부서협의 기간 : 2015년 9월 2일 ~ 9월 12일(10일간)

나. 협의내용 : 성별영향분석 평가(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10. 관련부서 :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정책관 공정경제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지정취소등”을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으면”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부서명 | | 기업지원과 |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기업지원과장 김재의 |
| | 팀장 직위·성명 | 지역경제팀장 하상원 |
|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이창준 (790-5194)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 ----- ----- ----- -----. |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 제13조(----- 지정취소 등) <삭 제> |
| <신 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
| <신 설> |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를 |

《 관계법령 발췌서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창업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

| 현행 | 개정안 |
|---|---|
| | <u>준용한다.</u> |
|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생략) |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
| <u>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u> | <u>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u> |
| <u>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u> | <u><삭 제></u> |
| <u>2.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u> | <u><삭 제></u> |
|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u>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u>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 ----- <u>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으면</u> ----- -----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기타 참고사항 》

□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1.13 조례 제1038호

(일부개정) 2011.10.18 조례 제1078호

(일부개정) 2012.06.18 조례 제1110호

(일부개정) 2012.08.09 조례 제1122호

(일부개정) 2014.03.12 조례 제12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는 하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하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남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하남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남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

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하남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남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제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하남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하남시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하남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하남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하남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하남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기타 하남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하남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 ④ 부회장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회의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회의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선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하남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公示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하남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하남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公示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목개정 2014.3.12>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3.12>

1. 삭제<2014.3.12>

2. 삭제<2014.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 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신설2012.6.18><개정2012.8.9><개정 2014.3.12>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신설2012.6.18><개정 2014.3.12>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6.18><개정2012.8.9><개정 2014.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3.12>

③ 시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4.3.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3.12>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3.12>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하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하남시 거주 주민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2.6.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개정2012.8.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삭제>

부칙<개정 201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